

⇒ 이러한 비용상승은 가맹점수수료 부담 전가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

* 대형 법인회원에게 제공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됨

② 또한, 6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의 갱신·대체발급을 위해서는 서면 동의만 가능함에 따라 자신의 동의의사를 표명함에 있어 방식 면에서 불편이 있었습니다.

○ 이에 따라 갱신발급 기한을 놓쳐 카드를 새로이 발급받아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, 소비자 불편 사항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.

□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

○ 동 개정안이 '20.12.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.

※ (추진경과) 입법예고('19.10.17.~11.26., '20.6.4.~6.15.), 규개위 심사('20.5.22 ~ 6.26.), 법제처 심사(~'20.12.11), 차관회의('20.12.17), 국무회의('20.12.22)

2 주요 내용

① 앞으로 신용카드사는 법인회원(소기업 제외)으로부터의 연간 이용 실적 대비 과도한 경제적 이익 (예 : 연간 카드 이용액의 0.5% 초과)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.

② 소비자는 이용 실적이 없는 카드에 대해서는 서면 뿐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갱신·대체발급이 가능합니다.

①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(별표 1의3)

□ (현행) 그간 법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.

□ (개선)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,

- 법인회원으로부터의 ①총수익, ②총비용,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, ③법인회원의 규모 등*을 고려하여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(※ 구체적인 기준은 감독규정에서 규정)

* [감독규정(안)] ①총수익 : 연회비 + 가맹점수수료(평균 약 1.8%)
②총비용 : 카드사의 결제서비스 운영비용 + 경제적 이익(마케팅비용)
③전체 법인 약 677만개 중 소기업은 약 666만개(약 98%) ('19년 추정)

- 특히, 소규모 법인(전체 법인의 약 98%)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에 위임*하였습니다.

* (감독규정(안))	대기업·중기업에 대해 ①총수익 ≥ 총비용 범위 내에서, ②혜택 상한(카드 이용액의 0.5%) 규제 적용
	소기업에 대해서는 ①총수익 ≥ 총비용 규제만 적용 (②는 未적용)

⇒ 이에 따라, 그동안 카드사로부터 혜택이 집중되었던 법인 (대기업·중기업) 위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제한되어 가맹점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② 무실적 카드*의 갱신·대체발급시 동의 채널 다양화 (제6조의6)

* 갱신·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

□ (현행) 그간 무실적 카드의 갱신·대체발급을 위해서는 서면 동의만 가능* 하였습니다.

* ①낮은 서면 도달률, ②동의절차 복잡에 따른 발급 실패·포기 등으로 무실적 카드가 제때 갱신발급되지 않는 경우 존재 → 유효기간 만료 후 신규발급 필요

□ (개선) 서면, 전자문서 뿐 아니라 전화 등으로 갱신·대체발급 동의수단을 다양화하여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.

3 향후 일정

-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
- “법인회원 경제적 이익 제한” 관련 규정은 과도한 경제적 이익의 세부기준을 규정한 감독규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‘21.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
---	---	--	---	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